올해 유동성·이익 동시 작동… 빅테크 중심 'AI·로봇' 집중

코스피 5000시대 열린다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넘어 7500도 달성할 수 있을지 전망하고 있는 이미지.

#.직장인 최모(37)씨는 요즘 재테크의 '재'자만 들어도 화가 치솟는다. 저조한 투자 성적 때문이다. 2025년 한 해 수차례에 걸쳐 HMM·대한한공 같은 국내 대형주에 5000만원가량 투자했지만 최근 주가 급락에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14%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겨우 장만한 아파트도 불안하다. 다른 지역은 다 오른다는데 7억4000만원대에 산 서울 도봉구 창동 전용면적 58㎡ 아파트값은 나홀로 옆 걸음이다. 최씨는 "주식도, 부동산도 상투를 잡은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주식에 1억원을 투자한 직장인 김모(33)씨의 성적도 참담하다. 한때 30%를 넘어선 수익률이 최근 10%로 수직 낙하했다. 김씨는 "갑작스러운 하락에 손쓸 틈 없이 손실이 커졌다"며 "추가 자금 투입도 어려워 오를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속이 쓰린 건 공공기관에 다니는 이모(40)씨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0월 미국시장 주식 투자로 입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3종에 4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중 1500만원은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마련했다. 하지만 지금 수익률은 -10%대를 맴돈다. 이씨는 "오르는가 싶으면 떨어지고, 떨어질 땐 폭락을 반복해 계좌가 쑥대밭이 됐다"고 말했다.

'사천피'(코스피 지수 4000) 시대를 연 증시가 5000이라는 신기원을 향해 달리고 있다. 코스피는 12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지난 한해 75.63% 상승했는데, 이는 미국의 나스닥(20.36%), 일본 닛케이225(26.65%), 중국 상하이 종합(18.30%) 등 주요국 증시를 크게 따돌린 연간 누적 상승률 1위 기록이다.

하지만 코스피의 이례적인 불꽃 행보에 혼란스러워진 것은 개인투자자들이다. 하루가 멀다고 전해지는 신고가 행진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과 조정 가능성을 제기하는 우려가 커지면서 발을 빼야 할지, 더 담가야 할지 쉽게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다. 상승장에 뒤늦게 뛰어들면서 수익률도 신통치 않다.

코스피 불꽃행보… 지난해 75%↑ 시장 과열·조정 우려에 갈팡질팡

美 테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주목 유동성 확대·정부 기조에 주식 관심

새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경기 둔화'가 여전히 시장을 짓누를 것이라는 부정적 그림자도 동반하고 있다. 변화의 물결 속 자산관리의 키는 어디에 둬야할까. 국내 시장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곳은 다시 미국 테크, 그중에서도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다. 골드 러시에 비유되는 AI 혁명에서 이미 많이 팔린 곡괭이(엔비디아 등 빅테크)를 이을 차세대 주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 증시로 향해는 글로벌 유동성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전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중비제도(Fed) 자산' 비율은 오랫동안 5~6%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그렇지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유동성 확대 정책이 지속하면서 2025년 10월 말 현재 이 비율은 21.6%까지 높아졌다. 실물경제 대비 화폐 영역에서 풀린 돈의 규모가 금융 위기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한국 시장에 돈이 넘쳐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M2(광의통화)'는 4056조8000억원에 이르렀다. 1년 만에 5.2% 늘어난 것으로 증가세로 따지면 미국보다 더 가파르다.

2026년 4월부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따라 향후 예금 이자소득 대신 주식 배당소득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머니무브'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내다본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주식과 함께 금과 코인 등 대체자산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유동성 때문"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풀린 유동성이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후 달러가 불안정해지자 늘어난 유동성이 대체자산에 몰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 만큼 투자처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도 감지된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7월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물은 조사에서 '주식'(31%)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갤럽이 2000년 같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 부동산(23%)을 앞섰다. 갤럽은 "'부동산 대신 주식'을 표방하는 정부 기조에 따른 변화"라고 해석했다.

대통령실은 투자 자산의 긍정적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부동산은 장기간 자금이 묶여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주식 시장에 자금이 흘러가면 기업 투자와 노동자 수입·소비를 늘려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생산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건실화되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해지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사회 전체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증권가는 2026년 한 해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봤다. 토스증권은 2026년을 '강세장 4년차' 국면으로 규정하며,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상승 구조 자체가 쉽게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2024년이 인공지능(AI) 기대가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린 시기였다면, 2025년은 실제 기업 이익이 주가를 주도한 국면이었고, 2026년은 이익과 유동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간이라는 해석이다. NH투자증권도 변동성지수(VIX)와 투자 심리지표가 단기적으로 급등했지만, 하이일드 스프레드나 국채·원자재 시장 등에서는 위기 국면을 시사하는 신호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투자 심리는 흔들리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 전반이 다시 긴축 국면으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증권가, 올해 '강세장 4년차' 규정 조정 있더라도 상승구조 유지할 듯

상위 자산, 소수 종목 집중형 전략 핵심 투자처 '인공지능·로봇' 꼽아

◆ 파티를 즐길 투자처는 어디?

넘치는 유동성 장세에서 위험은 줄이면서 파티를 즐길 곳은 어디에 있을까. 큰 손들은 '주식'을 꼽는데 주저함이 없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는 향후 1년 이내 단기에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 대상으로 주식(55%·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금·보석(38.8%), 거주용 주택(35.5%), 거주용 외 주택(25.5%), 펀드(14%) 등이 뒤를 이었다. 3~5년 중장기 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유망 투자처로도 주식(49.8%)이 1위로 꼽혔다. 거주용 주택(34.8%), 금·보석(33.8%) 등도 언급됐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한양증권이 지난해 1~11월 예탁자산 1000만원 이상 고객 계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그룹은 예탁자산 10억 원 이상 고액 계좌였다. 이들의 평균 수익률은 80%로 집계돼, 같은 기간 코스피·코스닥 평균 상승률(51%)을 크게 상회했다. 한양증권은 고액 계좌일수록 대형주 중심의 안정적 포지셔닝과 낮은 회전율, 즉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는 전략을 공통적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장 조정기에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상승장에서는 누적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포트폴리오 구성도 특징적이다. 상위 자산 계좌 대부분은 투자 종목을 5개 내외로 압축한 '소수 종목 집중형' 전략을 택했다. 다양한 종목에 분산하기보다 대형주·주도주에 집중해 상승장에서 수익률을 끌어올린 것이다.

증권가가 보는 핵심 투자처는 인공지능(AI), 로봇 등이다.

삼성자산운용은 '26년 전망 키 차트'에서 "2026년 미국 증시는 닷컴버블 이후 처음으로 4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에 도전할 것"이라며 "빅테크를 코어 투자처로 가져가되 휴머노이드 등 에이전틱 AI 적용 분야 확산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AI 관련 추천 ETF 중 하나로 'KODEX 미국휴머노이드로봇'을 꼽았다. 신한자산운용은 지난달 열린 신한금융시장포럼 '2026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에서 "AI 확산 과정에서 변화하는 주도주에 주목해야 한다"며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한 인프라에서 팔란티어 같은 서비스 기업으로 주도주가 변화했고 그다음은 AI가 적용되는 새로운 산업 분야, 즉 로보틱스, 모빌리티, 헬스케어, 우주·방산"이라고 분석했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상반기 '가상자산 선진화' 목표… '원화코인' 논쟁은 여전

정부,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논의 통과 시 가상자산거래소 책임 명확해져

원화코인 발행요건, 감독권한 이견 가상자산 경쟁력 '골든타임' 잡아야

2026년은 '가상자산의 해'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올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가상자산 규율 현실화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선진화'를 논의하고 있고, 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ETF 등 파생상품 취급 허용 등도 주요 현안이다.

◆ '가상자산 규제 현실화' 가시권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올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지위를 명확히하고,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둔 법안이다. 당초에는 지난해 말까지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였던 만큼, 정치권은 상반기 내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를 분명히했다.

가상자산 규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한 것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환경이 국제 표준에 크게 뒤쳐졌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가상자산의 상장 및 폐지 기준 마련, 가상자산 발행자 정보 공시, 거래사고 발생 시 책임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이 명확해진다. 금융권과 유사한 소비자 보호 체계가 구축되는 만큼 자금유입 활성화가 기대되며, 사후 규제의 불확실성에 위축됐던 거래소들도 적극적인 영업 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된다.

◆ 법인 거래·외국인·파생상품 논의도

'가상자산 선진화'가 가시권에 진입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법인 거래, 외국인 고객, 파생상품 등 가상자산 업계의 '새 먹거리'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됐다.

국내에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은 없지만, 지난 201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계좌를 요구하게 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차단됐다. 반면 해외 거래소에서는 법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해당 규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법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같은해 6월에는 대학·기부금단체 등 일부 비영리 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법인에 한해 거래가 허용됐으며, 당초 지난해 하반기를 목표로 했던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법인은 올 상반기 중 거래가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부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 허용에 대한 관심도 높다. 현재 외국인은 국내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한 상태다.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기대도 높다.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금융권을 통한 간접 투자도 가능해지는 만큼, 대규모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 '원화코인' 잡음 지속 쟁점

지난해 하반기 입법 지연의 주 요인이 됐던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논의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원화 코인의 발행 요건과 감독 권한을 놓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견해차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여당은 당초 금융당국이 제출한 정부안을 기반으로 입법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자체적인 입법 논의에 돌입한 상황이다.

6월 초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위한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잡음으로 전체적인 입법 절차가 지연된다면, 지방선거 이후까지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최근에야 입법 논의가 활성화된 만큼, 뒤쳐진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안승진 기자 asj1231@